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p style="text-align: center;">'15.1.9.(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p>	
---	--	---

구 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작성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책 임 자	송현도 팀 장(02-2156-9680)	김재신 과 장(044-200-4300)
담 당 자	류성재 사무관(02-2156-9683)	구태모 사무관(044-200-4304)
배포부서	대변인실(02-2156-9543~48)	대변인실(044-200-4081)

제 목 :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 공정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

I. 추진배경

-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이하 금융위)의 전문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의 독점규제 등 양 기관의 이원적 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 금융위 : 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업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 및 감독
공정위 :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금융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 제한행위 규제

-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을 중복규제로 인식하는 등 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해왔음

- ☐ 금융위와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새로 체결

* 금융회사(금융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금융위-공정위간 협약

-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국·과장급 협의채널을 통해 MOU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양 기관의 위원장이 1.8(목) 교차 서명
- '07년 최초 체결된 이후 집행실적이 미미했던 기존 MOU를 개편하고 운영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

II. 주요 개정내용

① 행정지도 사전협의시스템 구축

- 행정지도 단계에서 부터 금융회사의 위법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
 - (금융위) 행정지도 시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필요시 공정위와 사전협의 가능
 - (공정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 결과를 신속히 회신

② 중복규제 부담의 실질적인 경감

-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되, 행정지도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 다만,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음
 - (금융위) 행정지도 시 금융위 고시(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
- ⇒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 경우 행정지도의 존부에 대한 소명이 어려웠던 금융회사의 애로 해소
- (공정위)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
- ⇒ 행정지도 등 정부시책이 위법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 과징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과징금 부담 완화

※ 기존에도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는 과징금 고시 적용을 고려해왔으며, 이번 MOU 개정안에 동 내용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

③ 실무협의기구 활성화를 통한 MOU 이행체제 강화

- 기존에 실무협의기구가 운영되지 못해 MOU의 적극적 이행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 실무협의기구*를 1~2월중 발족할 예정
 -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하되, 사안별로 관련 실·국장 및 팀장(금감원 포함) 등이 참석 가능
 - 실무협의기구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상시 운영

4 MOU의 이행가능성 제고

- 이행이 상호 곤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MOU 이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조사계획의 상호확인 등의 조항은 조사업무의 대내외적 보안 필요성 등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양 기관 모두 이행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시 삭제

III. 기대 효과

- 양 기관간 적극적인 MOU 이행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적극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 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원칙적으로 위법한 부당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 감경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금전 제재 부담 완화 도모

- 아울러, 실무협의기구를 MOU 이행 뿐 아니라, 중복규제 등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창구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 제시

- 참고 1. 사례로 보는 개정 MOU 향후 기대효과
2. MOU 주요내용 요약
 3. MOU 신·구조문 대비표
 4. MOU 전문

※ 보험회사 담합 관련 실제 제재 사례

- 24개 생·손보사는 금감원 구두 지시 등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 보험료의 할인·환급축소·폐지를 합의, 결정함('04.7.~'07.3.)
- 공정위는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10,593백만원)을 부과('08.10.)하였으며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정('12.5.~6.)

1. 기존 절차에 따른 문제점

- ① (구두 행정지도) '04.7월, 금감원은 관련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자 생·손보협에 할인·환급을 폐지 등의 합의를 구두로 행정지도

⇒ 행정지도의 적법성 및 존부 확인 곤란

- ② (사전협의 미흡) 금융회사 합의를 지시하는 행정지도의 공정거래법 위배 소지에 대한 협의체계 부재

⇒ 양 기관 중복규제 가능성 등 규제 불확실성 존재

2. 금번 MOU를 통해 개선되는 사항

- ① (행정지도 투명화) 금융당국은 소관법령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문서로 행정지도하고 그 내용을 공개

⇒ 행정지도의 존부 및 행위의 정당성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입증부담 경감

- ② (사전협의) 금융당국은 필요시 상기 행정지도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협의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보험시장 및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 회신

⇒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의 위법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불확실성 제거

- ③ (과징금 경감)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 적용을 적극 고려

⇒ 원칙적으로 위법한 부당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 완화 도모

* 다만, 同 사례의 경우 합의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있었던 점을 고려, 과징금 20% 감경 적용

참고 2

금융위 - 공정위간 MOU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1. 기업결합	금융위는 금융회사 합병과 자회사 편입 등의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와 협의하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함	
2. 부당 공동행위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등의 부당공동행위를 규율하며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	
	금융위는 행정지도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신규
	금융위는 행정지도 관련하여 필요시 공정위와 사전협의하고 공정위는 금융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답변해야함	신규
	공정위는 행정지도 범위 내 개별적 행위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	
	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 혐의 심사시 금융위 의견을 최대한 고려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	신규
3. 불공정 거래행위	양 기관은 소관법령에 따라 각기 필요한 조사·조치를 할 수 있음	
	양 기관은 중복조치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위해 타 기관의 조치 내용이나 수준이 충분한 경우 별도의 조치나 제재를 하지 않음	
	타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소관법령에 따라 조치·제재하고 조사보고서 등에 타 기관의 조치내용을 반드시 기재	
	타 기관이 금전 제재시 해당 기관은 이를 감안하여 과징금 등 산정	
4. 부당 표시광고	양 기관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조치함	
5. 약관	양 기관은 금융회사 약관에 대해 심사·조치할 수 있음	
6. 공동연구	양 기관은 효과적인 규제체계의 개편방안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법령 제·개정시 반영	보완
7. 실무협의 기구 운영	양 기관은 MOU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의 및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기구를 구성	
	실무협의기구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논의안건 등은 양 기관의 협의하여 정함	보완

현 행	개정안
1. 기업결합	1. 기업결합
1.1 금감위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합병과 자회사 편입 등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를 미리 공정위와 협의한다.	1.1 금융위 _____ _____ _____ _____.
1.2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좌 동)
1.3 공정위는 1.2의 경쟁제한성 심사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특수한 사항에 대한 금감위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1.3 _____ 금융위 _____ _____.
2. 부당 공동행위	2. 부당 공동행위
2.1 금리, 수수료, 기타 거래조건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공정위가 규율한다.	(좌 동)
2.2 금감위(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2.2 금융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_____ _____ _____.
(신 설)	2.3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소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고, 금융위 고시(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현 행	개정안
(신 설)	2.4 금융위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에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정지도가 공정거래법령의 부당 공동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신 설)	2.5 공정위는 2.4의 사전협의를 대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2.3 공정위는 위 2.2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로 조치하지 아니한다.	2.6 ————— 2.2 내지 2.3의 ————— —————.
2.4 공정위는 금융회사간 부당 공동행위 협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행정지도의 여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u>금감위</u> 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2.7 ————— ————— 금융위 ————— —.
(신 설)	2.8 공정위는 금융위의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금융회사간 부당 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시 공정위 고시(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한다.
2.5 금감위는 위 2.2의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2.9 금융위—— 2.2 내지 2.3의 ————— ————— —————.
3. 불공정 거래행위	3. 불공정 거래행위
3.1 양 기관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소관 법령에 따라 각기 필요한 조사와 조치(금융감독원의 검사 또는 제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할 수 있다.	(좌 동)

현 행	개정안
3.2 양 기관은 중복조사 또는 중복조치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2 ——— 중복조치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 기관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3.2.1 양 기관은 각각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상대 기관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동일 사안에 대한 조사여부를 불문한다)가 진행 중(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인지 여부를 문의한다. 이 경우 문의과정에서 알게 된 타 기관의 조사계획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3.2.2 상대 기관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양 기관은 해당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한 조사절차를 중지하고, 제6절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조사주체,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조사시기 등에 대해 협의한다.	(삭 제)
3.2.3 상대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치를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완료한 경우 다른 기관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3.2.3.1 내지 3.2.3.3.에 따라 처리한다.	(삭 제)
3.2.3.1 타 기관의 조치내용이나 수준이 해당 기관이 운용하는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조치나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	3.2.1 ————— ————— ————— —————.
3.2.3.2 타 기관의 조치내용이나 수준이 해당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소관법령의 목적 달성에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은 제6절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협의기구에서 논의를 거친 후 소관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되, 조사 보고서 등에 타 기관의 조치내용을 반드시 기재한다.	3.2.2 ————— ————— ————— 소관법령에 따라 조치나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보고서 등에 타 기관의 조치내용을 반드시 기재한다.

현 행	개정안
3.2.3.3 타 기관의 조치가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이를 감안하여 과징금 등을 산정한다.	3.2.3 ————— ————— ————— ——.
3.3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금융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간 불공정 거래행위는 공정위가 규율한다.	(좌 동)
4. 부당한 표시·광고	4. 부당한 표시·광고
4.1 양 기관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각기 필요한 조사와 조치(금융감독원에 의한 검사와 제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를 한다.	(좌 동)
4.2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타 기관이 <u>조사 또는 조치</u> 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위 3.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4.2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타 기관이 <u>조치</u> 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위 3.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5. 약관	5. 약관
5.1 <u>금감위</u> (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와 공정위는 소관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의 약관에 대해 심사하고 조치할 수 있다.	5.1 <u>금융위</u> (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 ————— ————— —————.
(신 설)	6. 공동 연구
5.2 양 기관은 <u>약관 규제체계의 개편방안</u> 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를 법령 제·개정시 반영한다.	6.1 ——— 동 협약에 규정된 규제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규제체계의 개편방안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 —————.

현 행	개정안
6. 실무협의기구 운영	7. 실무협의기구 운영
6.1 양 기관은 이 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력방안 및 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이견사항 등을 협의하고,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한다.	7.1 _____ _____ _____ _____.
6.2 실무협의기구는 <u>감독정책1국장(금감위)과 경쟁정책본부장(공정위)</u> 으로 구성하되, 사안별로 관련 실·국장 및 팀장(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 등이 참석할 수 있다.	7.2 _____ <u>금융정책국장(금융위)과 경쟁정책국장(공정위)</u> _____ _____ _____.
6.3 실무협의기구는 <u>분기별 회의를 개최</u> 하되, 한 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3 _____ 한 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논의안건 등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7.4 실무협의기구는 이 협약에 따른 기관 간 업무협의 실적 목록을 반기별로 공유한다.
7. 시행일	8. 시행일
7.1 이 협약은 서명일 익일로부터 시행한다.	8.1 _____ -.

금융회사(금융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금융위 - 공정위간 협약

이 협약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각각 “금융위”와 “공정위”로 하고, 함께 칭할 경우에는 “양 기관”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또는 금융사업자. 이하 같다)에 대한 규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업결합

- 1.1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합병과 자회사 편입 등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공정위와 협의한다.
- 1.2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 1.3 공정위는 1.2의 경쟁제한성 심사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특수한 사항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2. 부당 공동행위

- 2.1 금리, 수수료, 기타 거래조건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공정위가 규율한다.
- 2.2 금융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2.3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소관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고, 금융위 고시(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2.4 금융위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에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정지도가 공정거래법령의 부당 공동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 2.5 공정위는 2.4의 사전협의를 대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2.6 공정위는 위 2.2 내지 2.3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로 조치하지 아니한다.

- 2.7 공정위는 금융회사간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행정지도의 여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 2.8 공정위는 금융위의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금융회사간 부당 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시 공정위 고시(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한다.
- 2.9 금융위는 위 2.2 내지 2.3의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3. 불공정 거래행위

- 3.1 양 기관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소관 법령에 따라 각기 필요한 조사와 조치(금융감독원의 검사 또는 제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를 할 수 있다.
- 3.2 양 기관은 중복조치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 기관이 범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음 -

3.2.1 타 기관의 조치내용이나 수준이 해당 기관이 운용하는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조치나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

3.2.2 타 기관의 조치내용이나 수준이 해당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소관법령의 목적 달성에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은 소관법령에 따라 조치나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보고서 등에 타 기관의 조치내용을 반드시 기재한다.

3.2.3 타 기관의 조치가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이를 감안하여 과징금 등을 산정한다.

3.3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금융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및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간 불공정 거래행위는 공정위가 규율한다.

4. 부당한 표시·광고

4.1 양 기관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각기 필요한 조사와 조치(금융감독원에 의한 검사와 제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를 한다.

4.2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타 기관이 조치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위 3.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5. 약관

5.1 금융위(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와 공정위는 소관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의 약관에 대해 심사하고 조치할 수 있다.

6. 공동연구

6.1 양 기관은 동 협약에 규정된 규제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규제체계의 개편방안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를 법령 제·개정시 반영한다.

7. 실무협의기구 운영

7.1 양 기관은 이 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력방안 및 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이견사항 등을 협의하고,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한다.

7.2 실무협의기구는 금융정책국장(금융위)과 경쟁정책국장(공정위)으로 구성하되, 사안별로 관련 실·국장 및 팀장(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 등이 참석할 수 있다.

7.3 실무협의기구는 한 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논의안건 등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7.4 실무협의기구는 이 협약에 따른 기관 간 업무협의 실적 목록을 반기별로 공유한다.

8. 시행일

8.1 이 협약은 서명일 익일로부터 시행한다.

2015. 1. 8.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 제 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 재 찬